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17.84	↑ 코스닥	661.59
	(+57.26)		(+34.58)
↓ 금리 (미국 9년)	2.524	↓ 환율 (원·달러)	1428.70
	(-0.055)		(-8.30)



‘출국금지’尹, 사상 최초 강제수사·긴급체포 가능성도

특수본,尹 대통령에 ‘내란죄’ 적용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 적용 안돼
‘내란공모’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
이상민·이진우 소환조사 통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검·경에서는 강제수사 및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수괴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을 시켜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중이라며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이 경찰은 내란행위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처벌까지 가능하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행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모 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탄핵정국 관련기사 2·3·4면〉

내란혐의 상설특검尹 신속체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인에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은 자율투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내란 상설특검 찬성 210표 ‘가결’
곽규택 등 국민의힘 23명 찬성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 수 없어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1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또,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일종의 거부권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서예진 기자 syj@

野 주도 ‘4.1조 감액’ 내년 예산안 통과… 673.3조 확정

찬성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부결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673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감액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 찬성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9일)부터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와 예산안 증액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정부는 67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에서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해 처리했다. 거대의석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을 추가로 7000억원 감액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감액한 4조1000억원에서 예비비 1조8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에 필요한 3000억원을 복원을 요구하고 민주당의 정책적 요구인 지역화폐 4000억원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원,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지원 예

산 2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선 그 규모에 맞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당정도 거부하며 감액 예산안대로 통과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

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일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내란대책위 “탄핵 외 길 없다… 외교·경제위기 관리 당력 집중”
▲ 한동훈, 중진들 권선동 원내대표 추대에 “적절하지 않아” /사진 뉴스1

▲ 법사위 법안소위,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의결
▲ 한 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최선… 北 도발시 즉각 대응태세 유지”



▲ 여 내부서 “14일 탄핵안 표결 참여해야” 의견 /사진 뉴스1
▲ 거래스 찾은 야3당 “국가신용 불확실성 커져… 안정 방안 고민”